

# “수서발 전라선 필요성에 공감”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 국토위 종합감사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처리” · 정동영 의원 “약속 이행할”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수서발 전라선을 투입해야 한다'는 민주당 정동영 대표 질의에 “수서발 전라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수서발 전라선 운영 문제를 처리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동영 대표(사진)는 지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는 ‘평창올림픽이 끝난 이후 차량에 여유가 생기면 수서발 전라선 운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도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수서발 전라선 투입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2016년 6월 수서발 전라선 SRT 노선 허가를 촉구하는 ‘수서발 고속철도(SRT) 전라선 노선 허가’와 코레일 고속철도(KTX) 운행 횟수 증편 촉구 결의안을 여야

국회의원 38인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2016년 12월 29일 정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 162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2017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명수 철도국장은 “수서발 전라선 운영 문제는 평창올림픽이 끝난 이후 차량에 여유분이 생기므로, 그 부분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심신미약 형량 감경 사법정의 구현 장애 검토”

이낙연 총리, 국무회의서 법무부에 요청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 지자체 등 협조를”



이낙연 국무총리(사진)는 최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과 관련, “심신미약의 경우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현행 형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지 검토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검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경찰청은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해달라”며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는지 (점검하고), 만약 그렇다면 보완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오는 11월 2일 출범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의 조사에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기됐다. 감사원 감사 등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믿지만, 드러난 것이 전부인 아닐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추진단을 발족하자마자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의혹 제기만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중단 또는 지체되지는 말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보완할 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비리 소지를 없애달라. 정규직 전환 자체는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올해 국정감사가 이날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국회에서 전개될 예산안·법안 심의에 각 부처가 심혈을 기울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 총리는 자유한국당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뉴스시스

# 대법원 “日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 13년만에 최종 결론

신일철주금 손해 배상고심 피해자 손해 청구권 인정 “한일청구권협정 적용대상 포함 안되는 것이 타당”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춘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1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다시 접수된 지 5년2개월 만에 이뤄졌다. 또 지난 2005년 2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8개월 만에야 그 끝을 맺게 됐다. 이 기간에 소송 당사자 4명 중 3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세만이 유일하게 생존해있다. 이씨는 호적상 1924년생으로 95살이지만 실제 나이는 98세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인 대법원장을 포함해 7명의 다수 의견으로 이같이 결론이 났다. 또 결론은 같으나 이유가 다른 대법관 4명의 별개 의견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한 청구권으로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

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일청구권협정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돼 그 권리가 제한되므로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이 밖에 재판부는 일본의 확정판결 효력이 국내에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해 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 청

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 내용이 우리 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내 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일본 기업 측 주장도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강제징용 소송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청와대 요구에 따라 선고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등의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뉴스시스

# “도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 되도록”

도의회, 오늘까지 의원 연찬회

전북도의회는 도의원들과 사무처직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군산시 일원에서 2018년 도의회 전체의원 연찬회를 진행한다. 이번 연찬회는 현대조선소 가동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에 처한 군산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군산시 일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도민의 아픔을 함께한다는 의미의 상징성 있는 연찬회로 개최한다. 11월 정례회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전문가 초청 특강을 통한 감사방법과 예산심사 기법 등 업무연찬 자리도 마련했다. /김진성 기자

또한,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결속을 다지는 5개 상임위원회별로 소회의 시간도 가졌다. 도의회 김대중 운영위원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물론,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과 의원 상호간 화합 단결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도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연찬회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조직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성숙한 의회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 청년의 꿈이 농업에서 새롭게 피어납니다

꿈을 꾸는 청년들이 농촌으로 모입니다  
청년들의 꿈과 함께 농업은 더욱 새로워집니다  
농촌에서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피어나도록  
농협이 함께 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 지부장 이문식

고창농업협동조합  
해리농업협동조합

선운산농업협동조합  
흥덕농업협동조합

대성농업협동조합  
고창부안축협